

# 與 지지율 늘었다… 李·민주당 ‘악마화’로 보수진영 결집

국민의힘, 반년 만에 지지율 40%대 보수진영, 조기대선 기조에 李 반감↑ 민주당 가짜뉴스 대응선포도 정쟁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14일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집권과 민주당에 대한 강한 반감 등이 보수층의 결집을 불러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이 대표와 이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에 대한 반감을 상쇄하기 위해선 비상계엄 수습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조사(5.7% 응답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한 결과 민주당 42.2%, 국민의힘 40.8%, 조국혁신당 4.8%, 개혁신당 2.4%, 진보당 1.2%, 기타 정당 2.1%, 무당층 6.6%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양당 간 지지도 차이가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석열체포변호사단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를 배포하겠다고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근접하자 일대에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몰려들며 혼잡을 겪고 있다. /뉴시스

1.4%포인트로 지난 9월 3주차 같은 조사 이후 16주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작년 7월 3주차 이후 약 6개월 만에 40%로 올라섰다.

리얼미터 조사뿐 아니라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12:3 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와 함께 주저앉았던 정당 지지율이 오르는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

책회의에서 “우리 당이 착각하지 않아야 할 것은 결코 우리 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지해 주신 게 아니라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힘을 모아라’라는 질책과 당부의 뜻에 가까운 것”이라며 “탄핵 폭주, 특검 중독, 국가 핵심 예산 삭감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이재명 세력에 맞서 싸우며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절규 어린 호소”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국민의힘

은 민주당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과정 전후에서 발생한 논란을 집요하게 공격하며 보수진영의 결집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탄핵심판 사유 중 내란죄 철회 논란에서 명쾌한 설득 논리를 제공하지 못했고, 보수 유튜브들 사이에서 나오는 가짜뉴스에 초기에 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서 정당 지지율이 하락세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치러질 조기대선에서 이 대표가 야권의 대선 후보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대표를 ‘악마화’하고 있는 보수 진영의 결집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를 인식한 듯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이에 기대어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퇴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은 민주당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가짜뉴스를 퍼나르

는 행위를 내란 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카톡 검열’이라며 또다시 정쟁화하는 모습이다.

보수층이 결집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7일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 점도 꼽힌다. 강성 보수의 정서를 건드린 게 민주당 지지율 정체 및 보수층 결집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추후 내란죄 수사에 따라 이같은 현상은 쉽게 깨질 수 있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걱정해야 할 문제는 이런 결집과 보수층 과표집의 진앙지가 어디냐면 자유통일당, 태극기부대, 전광훈 목사”라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을 장악해 들어가서 당이 포획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마저 거기 가서 줄 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상황이 지나가서 포연이 가라앉고 나면, 남아 있는 정당은 합리적 보수 정당이 아니고 극우 정당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두 번째 ‘내란특검법’ 법사위 통과… 與 자체발의 ‘계엄특검법’ 변수

野, 이르면 오늘 본회의서 처리 방침 계엄특검법 내용 바탕으로 협상 전망 與, 野 주도 처리에 반발… 표결 불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공동 발의한 두 번째 내란일반특검법(내란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4일이나 16일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내놓는다면 협상의 여지도 남아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지난 9일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은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수사범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유치 혐의’까지로 넓히고, 야당의 재추천 요구권(비토권)은 담지 않았다.

외환 유치 혐의는 야당이 애초 발의한 원안에는 없었지만, 지난 10일 소위원회 의결 당시 야당 주도로 포함됐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

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그 내용을 언론 브리핑으로는 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수사범위를 외환유치로 확대한 것과 특검법의 명칭 등을 문제삼았다. 또 최장 150일인 수사기간과 총 155명인 수사인력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의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공세성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지난 1년간의 안보 이슈를 외환죄로 수사하지는 것이 자의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은 “수사 대상 8호에 외환죄 관련 조항이 들어갔는데,

해외 분쟁 지역 파견이나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관련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일부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규정된 것이 있다”며 과잉 수사라고 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계속 거짓 선동을 한다. 이 특검법에 외환유치죄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 있냐”며 “(수사 대상을 보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북방한계선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일반이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외환 혐의 조항에)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라는 한정적 문구가 붙어 있어 (수사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당연히 특검에서 수사해야 하는 범위”라고 맞섰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자체 발의할 ‘계엄 특검법’의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법원행정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한국헌법학회 등으로 다변화한 다거나 특검의 수사 기간을 민주당 안보다 더 단축하는 방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단일된 안을 내놓으면 그를 바탕으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서예진 기자 syj@

## 崔대행, 정치권에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 마련 당부

與 “두 번째 특검, 수용 어려움” 野 “합의 처리, 월권적 요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여야 대표를 찾아 ‘내란일반특검법(내란특검법)’ 합의 처리 등을 요청했지만,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을 합의하기 어렵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의 요청이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잇따라 회동하고 시급한 국정 현안에 대한 여야 협력을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는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며 “저도 관계 기관에 여러 차례 당부를 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노력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의 내란특검법 합의 처리 요청에도 여야의 입장차는 극명하게 갈렸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

란특검법은 합의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재 민주당이 새롭게 제출한 특검법은 내란죄와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있고, 외환죄 부분은 헌법적·현실적으로 우리의 국방 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내용”이라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서 헌법적 문제가 제거된,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재의 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 특검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야당과 국회의장을 계속해서 설득해나갈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특검법 합의 처리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특별한 언급을 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영세(왼쪽 사진 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오른쪽 사진 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접견하며 약속하고 있다. /뉴시스

지 않았다. 하지만 비공개 대화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월권적 요청”이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과 이 대표의 회동에 배석했던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동 내용을 전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여야 간 내

란특검법 합의 처리 요청에 대해 “여야 합의란 것이 어떻게 헌법·법률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냐”면서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해 이런 상황이 전개된 측면이 있으며 (합의 처리는) 월권적 요청”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서예진 기자